

체제전환국 국민의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 유형화: 국가 간 차이를 중심으로

권인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박준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전환국 국민의 복지·경제·정치 제도에 관한 인식을 유형화하고 어떤 국가군 혹은 개별 국가의 국민이 특정 인식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제공하는 LITS 자료를 활용하여 총 11개의 체제전환국(러시아와 중앙아시아 4개국의 CIS 국가 5개국, 동유럽 국가 6개국) 국민 1만 2,789명의 복지·경제·정치 제도에 관한 인식을 잠재집단분석(LCA)을 통하여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제도에 대한 체제전환국 국민들의 인식을 서로 다른 3개의 집단, 이른바 '체제전환 미숙형', '체제전환 진행형', 그리고 '체제전환 성숙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인식 유형이 국가군 및 개별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특히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의 국민이 동유럽 국가의 국민보다 인식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계획경제와 권위주의 정치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제전환국 내에서도 '소비에트 유산'이 불균등하게 잔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체제전환국, 소비에트 유산, 제도 인식, 비교사회정책연구

I. 머리말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제도에 관한 개인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국가의 제도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제도의 발전 전망을 예측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한 국가의 제도적인 배열과 개인의 미시적 환경이 맞물려서 형성되는 제도에 관한 개인의 인식은 특정 사회가 갖는 특수성을 투영하여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의 정당성(legitimacy)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레로 립셋(Lipset, 1961)은

* 주저자

** 공동저자

서구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민주주의적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이를 지지하는 중산층 계급의 확대가 존재하였음을 강조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비교사회정책 학자인 코르피(Korpi, 1980)는 고용보호정책을 지지하는 노동자 집단의 정치적인 세력화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복지국가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복지·경제·정치 제도에 관한 개인의 인식 데이터가 국가별로 구축됨에 따라 인식 연구의 경계는 국가 비교 연구 수준까지 확장되기도 하는 추세다(Andreß and Heien, 2001: 337).

그러나 사회경제적 제도에 관한 인식 연구는 그 대상을 주로 서구사회로 한정하여 살펴보는 데 그쳤다. 가령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0)이 제시한 ‘복지자본주의의 다양성’ 개념에 착안하여 ‘복지인식의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서도 체제전환국 국민의 인식 구조에 관한 설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Svallfors, 1997; Bonoli, 2000; Gelissen, 2000; Blekesaune and Quadagno, 2003). 이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제전환국 국민들의 사회 제도에 대한 인식 분야는 이론적인 공백(theoretical gap)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연구에서 체제전환국 국민이 특정 제도에 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도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으나(Mishler and Rose, 2001; Habibov, 2013; Pop-Eleches and Tucker, 2014) 복지·경제·정치 제도에 관한 인식을 종합해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를 마치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고 생각할 때 체제는 그 조직 구성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양식(pattern)을 의미하기 때문에 체제 전환이라는 사건은 어느 한 가지 영역에서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조직 내 모든 구성 요인들의 양식이 이전과 다른 형태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구소련 국가들이 1990년대에 경험한 체제 전환은 복지·경제·정치 제도 전반에 걸친 매우 광범위한 변화를 동반하였다. 따라서 체제전환국 국민들의 제도 인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느 한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대국가의 기본적인 전형(model)을 자유민주정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정의한다면 CIS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를 포함하는 체제전환국은 제도와 관련된 역사에 있어 다른 서구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경로를 밟아 왔다.

즉 서구에서는 양차 세계대전 전후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모델이 발전하였지만, 체제전환국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급진적 혁명을 거친 후 다시 서구의 모델로 가는 일종의 제도적인 후퇴를 경험하였다. 비록 체제 전환 과정을 거쳤으나 보편주의적 복지제도, 계획경제 모델, 권위주의 정치 체제로 대변되는 사회주의의 제도들과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띠며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서 계승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사회주의 전통(Socialist Tradition)’(Deacon, 1992), ‘레니니스트 유산(Leninist Legacy)’(Crawford and Lipjhart, 1997), ‘소비에트 유산(Soviet Legacy)’(Fenger, 2007) 등으로 명명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모두 현재로서는 표면상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복지·경제·정치 제도의 전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국민의 인식은 현재 서구사회의 것과는 질적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체제전환국 간에도 제도적인 배열(institutional arrangement)의 차이에 따라 개인들 또한 상이한 인식 구조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전술한 바와 같이 복지·경제·정치 제도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도 외에도 체제전환국 간에도 개인의 제도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체제전환국 국민들의 복지·경제·정치 제도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탐색적인 차원에서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중 5개국(러시아와 4개 중앙아시아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동유럽 국가 중 6개국(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의 총 11개 체제전환국 국민들의 복지·경제·정치 제도에 관한 인식 구조를 유형화한 뒤 어떠한 국가들이 특정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제도 인식에 관한 개념적인 접근 방식과 영향 요인, 주요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해나가면서 사회주의 제도의 유산과 체제 붕괴 이후의 제도적인 변화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한, 체제전환국 국민의 제도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의 주된 연구결과 및 한계점을 지적한다. 이어서 III장과 IV장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관점으로 체제전환국 국민들의 인식 구조를 유형화하고 국가군 및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분석법의 소개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V장에서는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체제전환이라는 독특한 역사적인 배경을 지닌 체제전환국 국민의 인식의 특성, 나아가 체제전환국 사회의 특성에 관하여 설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의 개념적 정의

일반적으로 제도에 관한 개인의 인식은 일정 정도로 체계화된 선호(preference)나 신념의 체계를 의미한다(노대명·전지현, 2011). 즉, 한 주체가 특정 제도와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갖게 되는 날 것 그대로의 느낌(raw feel)이라기보다는 제도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나 개념적 구조로서의 의식에 더 가깝다. 때에 따라서는 행동 지향 혹은 행위성향이 내포된 ‘태도(attitude)’나 인식과 태도가 결합한 상위 개념으로서의 ‘의식(consciousness)’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 서구에서는 ‘태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인식’이라는 표현보다 지지도나 선호도에 있어 명확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식을 유형화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의 설문 문항들이 대체로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특정 행동을 할 것인지(예: 투표, 시위 등)에 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를 질문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 근거하여 ‘인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한편 인식 연구에서는 추상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개인의 선호나 신념 체계를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개념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때 특정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에서 어떠한 제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념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복지 제도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면 영국의 사회학자인 테일러-구비(Taylor-Gooby, 1985)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사회복지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이자 기능이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부의 재분배(redistribution of wealth)를 통하여 해결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Bonoli, 2000; Gelissen, 2000; Blekesaune and

Quadagno, 2003; Svallfors, 2004; Jaeger, 2006; Larsen, 2008). 따라서 특정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그에 대한 비용 부담에 관하여 어떠한 인상과 느낌을 갖고 있는지 질문함으로써 복지인식을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복지 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단순히 정부가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납세 의사에 대해서도 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사람들이 질문에 대하여 응답할 때 복지제공에 있어서는 대체로 도의적인 측면에서 지지한다고 표명하지만, 조세와 관련하여서는 자기이해관계가 투영되어 강한 저항을 표출하기 때문에 복지 제도 인식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에 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비용 부담 의사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재분배 선호와 증세에 대한 태도는 독립적인 인식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조돈문(2001)은 복지인식을 복지제공에 대한 필요성, 책임 주체, 복지 재정 확대여부, 복지를 위한 증세의 총 4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손병돈(2016) 및 박미경·조민효(2016)의 연구결과에서도 복지인식의 하위 구성요소로서 복지확대에 관한 인식과 증세에 관한 인식을 설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복지인식은 항상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에 균열 지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 인식과 관련하여 국가의 재분배 정책과 납세에 대한 태도 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복지 제도에 관한 인식 연구들이 대체로 복지정책의 재분배 기능과 납세에 대한 의지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제도 인식을 개념화하였다면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에 관한 인식 연구는 구체적인 연구목적에 따라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먼저 경제 제도 인식의 경우 개인의 소유권에 초점을 맞추어 소유자 지배와 시장 내에서의 경쟁에 관하여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친자본주의 성향을 측정한 연구가 있는 한편(Landier et al., 2008),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거래 기능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에 관한 개인의 인식을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로 개념화한 연구도 존재한다(Mayda and Rodrik, 2005; Mayda, 2006). 이 밖에도 체제전환국 국민들의 경제 제도 인식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소비에트 유산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응답자들이 자본주의를 부정적인 감정(불평

등, 이기심, 억압, 부패 등)과 연결 짓는 빈도수를 통하여 이들의 경제 제도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는 등 연구 목적에 따라 상이한 접근 방식을 보여 준다(Pop-Eleches and Tucker, 2014). 마찬가지로 정치 제도에 관한 인식도 정부의 책임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정도, 이념적인 선호도,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등 연구 목적에 따라 상이한 접근 방식을 보여 준다(Edlund, 1999; Christensen and Lægread, 2003; Pop-Eleches and Tucker, 2014). 본 연구는 계획경제와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경험과 체제 붕괴 이후의 막대한 제도적인 변화가 체제전환국 국민들의 경제 및 정치 제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제도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대 계획경제 그리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정치라는 이분화된 구조에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제도를 선호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논의의 전개는 크게 개인 수준(individual level)의 요인과 국가 수준(national level)의 요인이 구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개인 수준의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개인의 가치관과 개인을 둘러싼 미시적 환경 등이 인식에 대한 결정구조를 형성한다고 전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국가 수준 요인에 주목하는 연구는 국가 간 '제도적 배열(institutional arrangement)'의 차이가 개인 간 인식의 차이로까지 귀결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Blekesaune and Quadagno, 2003: 416-417). 체제전환국 국민들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인식 유형에 있어서 체제전환국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도 국가 수준 접근 방식의 전제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에서는 제도에 관한 개인 인식의 차이가 정책에 대한 자기이해(self-interest) 관계를 투영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인 흐름으로 나타난다(Hasenfeld and Rafferty, 1989; Groskind, 1994; Svallfors, 2004). 즉, 특정 제도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때 해당 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다. 특히 복지제도는 제도적 혜택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인 간의 인식 또는 태도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정적으로 제도에 관한 개인의 인식 연구가 주로 복지정책과 맞물려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recipient)가 해당 제도의 확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식과 태도를 지니지만, 세금을 통하여 재정에 직접 기여하는 납세자(contributor) 집단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해외와 국내 학계에서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김윤태 외, 2013; 전희정·서동희, 2015; Hasenfeld and Rafferty, 1989; Cook and Barrett, 1992; Svallfors, 1997; Edlund, 1999). 공공부조의 확대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겐은 직접적인 이익으로 귀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에겐은 증세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낮은 연령대 집단에서 아동수당과 가족지원제도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높은 연령대에서 노령연금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이상록·김형관, 2013; Ponza et al., 1988; Pettersen, 2001; Andersen, 2008) 및 성별에 따라 지지하는 복지정책에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Svallfors, 1997; Edlund, 1999)가 이 같은 자기이해관계 개념에 착안한 개인 수준의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단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경제 및 정치 제도에 관한 인식 차이에 있어서도 개인 수준의 실증적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일례로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자리 대체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비숙련 노동자(unskilled worker)들은 자유무역으로 대변되는 개방 경제 체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yda and Rodrik, 2005; Mayda, 2006). 또한, 집권당에 투표한 국민들은 민주주의적 작동 방식에 관해서 우호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소수 정당에 투표한 국민들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Anderson and Guillory, 1997: 78).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경제 및 정치 제도에 대한 인식도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서 국가 수준에서 개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별로 상이한 형태의 정치·사회·경제 제도가 개인적 수준의 복지 인식과

경제 및 정치 체제 선호도에 있어서 서로 구별이 가능한 형태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한다(Svallfors, 2012; Bonoli, 2000; Gelissen, 2000; Jaeger, 2006; Larsen, 2008). 대표적으로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0)의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개념을 바탕으로 복지 체제 간의 복지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여러 비교사회정책 학자들은 (i) 제도적 환경과 정책 유산이 사회 집단 간에 정책적 논의에 대한 프레임을 규정한다는 점(Weir and Skocpol, 1985: 185; Svallfors, 1997; Edlund, 1999: 343; Larsen, 2008), (ii) 보편주의 복지제도, 의회민주주의, 개방시장경제와 같은 일련의 제도들이 규범적 질서로서 대중의 사회적 인식과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Rothstein, 1996: 24)에 근거하여 인식에 대한 제도의 영향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제도에 관한 개인의 인식은 앞서 설명한 내용처럼 자기이해관계로 대변되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결과물임과 동시에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 낸 대중의 공유된 가치관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서로 다른 유형의 복지레짐(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이 개인적 수준에서 복지 제도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대체로 탈상품화 지수가 높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한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속한 국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국민은 소득재분배와 국가의 시장 개입에 우호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탈상품화 지수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사민주의 체제보다 낮은 보수주의 체제에 속하는 국가(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와 자유주의 체제에 속한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소득재분배와 국가의 시장 개입에 관하여 비교적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Evans, 1996; Heien and Hofäcker, 1999; Svallfors, 2012: 8). 나아가 이러한 인식을 통하여 복지국가들을 다시 여러 개의 국가군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안드레스와 하이엔(Andreß and Heien, 2001)의 연구에서는 독일,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 국민의 복지 인식 자료를 기반으로 ‘복지국가 인식의 네 가지 체제(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를 개념적으로 정립한 바 있다.

개인 수준과 국가 수준에서 인식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연구결과들은 제도의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그 전망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론적·실증적 함의를 지닌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 간에 공유되

는 가치와 태도로서의 제도 인식은 정치 엘리트들에게 있어서 정책 결정과 추진에 신호(signal)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경제 제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인식이 역으로 제도의 운용과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피드백 효과(feedback effect)’ 개념은 제도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개인 차원에서의 제도 인식이 제도 발전과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칭한다(Pierson, 1993; Svallfors, 2007). 일례로 코르피(Korpi, 1980)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현대 복지국가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실업보험과 같은 노동 정책에 지지하는 노동자 계급과 사민주의 정당의 연합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 이를 설명하는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s Theory)을 정립한 바 있다. 또한, 안상훈(2009)의 연구에서는 복지정치 공간에 복지수급자, 복지서비스제공자, 복지납세자로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존재하며, 수급자와 제공자는 복지제도의 확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만, 복지납세자는 중세 부담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는 복지지위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만약 본 연구에서도 체제전환국 국민의 복지·경제·정치 제도에 대한 인식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체제전환국의 제도적인 발전 전망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소비에트 유산과 체제전환국 국민의 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

그렇다면 체제전환이라는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 구조는 어떻게 특징지어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기에 앞서 과거 소비에트 체제가 갖는 제도적 특수성, 즉 ‘소비에트 유산(Soviet legacy)’과 체제 붕괴 이후의 제도적인 변화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찍이 의회민주주의 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비스마르키언 복지국가 또는 베버리지형 복지국가를 발전시켜온 서구와는 달리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 속했던 체제전환국들은 독립된 형태의 제도적 발전 경로를 형성해 왔던 과거와 체제붕괴 이후 서구의 경제 및 민주주의 모델의 유입이라는 두 가지 막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이는 체제전환국 국민의 인식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크로폴드와 립하트(Crawford and Lijphart, 1997)는 사회주의의 과거 유산을 경제

표 1 사회주의제도의 유산

긍정적 유산	부정적 유산
• 직업 보장	• 불충분한 또는 제도가 부재한 실업 급여
• 평균임금 대비 높은 노동자 임금	• 당-국가 관료의 감춰진 특혜
• 무상 보건 서비스	• 저발전된 예방의학, 높은 사망률 및 이병률
• 직장여성의 아동 양육수당 및 직장 복귀 권리	• 노동 및 양육의 여성책임, 노동의 성별분업
• 높은 보조금을 받는 주택	• 주택분배의 불평등
• 국가운영의 사회보장 연금	• 물가연동 급여의 부재
• 국가운영의 질병급여	• 노동기록을 통한 급여의 규제
• 당, 국가 및 작업장의 온정주의	•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욕구표현 권리의 부재

적 후진성, 신엘리트층의 부재, 불안정한 정당제도, 상대적으로 더딘 국가건설 속도, 소비에트 체제에서 형성된 제도의 지속, 중앙집권적 형태의 국가와 계획 경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디아콘(Deacon, 1992: 5; 민기재, 2014: 54에서 재인용)은 과거 체제가 가졌던 역사적 특수성을 표 1과 같이 ‘사회주의 제도의 긍정적·부정적 유산’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먼저 긍정적인 유산으로는 노동의 의무라는 사회주의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완전 고용 보장 시스템과 이를 토대로 한 직업보장,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자의 임금, 무상 의료서비스, 여성 노동시장 참여자를 위한 모성 휴가, 비교적 빠른 시기에 도입된 국가 운영의 사회보장 연금 등이 있다. 실제로 과거 소비에트 연방 체제에 속했던 국가들은 서구사회의 국가들보다 더 오랜 기간의 사회보장 제도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에 따라 체제전환국 국민들은 비교적 사회보장정책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유산으로는 계획경제와 권위주의적 국가 권력으로 인한 정치 엘리트의 부패, 물가연동 급여의 부재, 사회적 권리 청구권의 부재 등이 언급된다. 특히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은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진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가 구축되었지만, 대통령과 집권당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체제 붕괴 이후에는 복지·경제·정치 제도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변화가 초래되었는데 매닝(Manning, 2004)의 연구에서는 탈사회주의 이후 1990년대의 제

도적인 변화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다. 체제 붕괴 직후 시점에 속하는 1단계는 시장 경제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의 급증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체제전환국들이 관대한 실업보험률을 유지하게 되면서 막대한 정부 지출을 감내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1990년대 중반에 해당되는 2단계에 들어서부터는 탈사회주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던 실업급여가 삭감되었다. 또한, 정치 체제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회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하여 대체로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잔여적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하게 된다(Manning, 2004: 217).

1990년대 후반에 해당되는 3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체제전환국 내에서도 경제 수준과 운영하는 복지 제도에 있어서 차이가 커지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슬로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의 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거시경제 수준, 정부의 안정화, IMF와 같은 국제기구의 원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비교적 낮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을 기록할 수 있었다(Getting, 1994). 반면 중앙아시아 5개국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사회주의의 부정적인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관계로 권위주의와 경제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민기채, 2014). 펙거(Fenger, 2007) 역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계획경제와 권위주의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는 소비에트 국가군(former-USSR group)으로, 압축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폴란드와 체코를 위시한 동유럽 국가들은 성공적인 체제전환국군(successful transitional states)으로, 루마니아, 몰도바, 조지아 등의 저성장 국가는 발전국가군(developing states)으로 분류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민주주의 수준과 경제성장 지표를 바탕으로 체제전환국의 제도적 특성의 유형 분류를 시도한 민기채(2014: 120-124)는 현재 EU에 속한 동유럽 국가를 민주국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저발전국가로, 러시아를 발전국가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물론 국제기구의 직접적인 개입 또한 체제 붕괴 이후의 제도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체제전환국들은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제기구(IMF, 세계은행)로부터 재정지원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대대적인

자유주의적 시장 개혁을 감행하였는데 이에 따른 대표적 정책 변화로는 사회주의 체제 시절 제공되었던 식품 및 주택 보조금의 철폐, 엄격한 재정정책, 가격 자유화, 사유화 보장 등이 있다(민기채, 2014: 65). 이러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외부 유입은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보편적인 서비스의 해체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로 대량 실업과 소득 불평등이 체제전환국 내에서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체제전환국 국민들은 복지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실제 높은 실업률과 소득 불평등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서 공공부조의 확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Blekesaune and Quadagno, 2003: 424)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이어서 그동안 체제전환국 국민들의 인식 구조를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직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체제전환국 국민들이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4개 체제전환국 국민들의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하비보프(Habibov, 2013: 280-281)의 연구에서는 연령대가 높고, 소득수준과 교육 수준은 낮으며, 여성인 집단에서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저발전되어 있고, 소득 불평등이 높은 캅카스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이 정부가 소득 불평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학자의 연구에서는(Mishler and Rose, 2001; Pop-Eleches and Tucker, 2014) 공산주의의 사회화(communist socialization)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았던 경험이 체제 붕괴 이후 구축된 민주주의 제도와 시장경제 체제에 관한 개인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주된 연구결과로서 체제전환국 국민은 경제성어나 민주주의 지수의 발전과 관계없이 시장경제나 민주주의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부모의 사회주의 체제 경험이 높을 수록 자녀 또한 그와 같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인식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크게 두 가

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위 선행연구들은 복지·경제·정치 제도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제도에만 초점을 맞춰 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체제 붕괴가 이루어진 지 이미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체제전환국 국민들의 복지·경제·정치 제도에 대한 인식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개인 수준의 요인과 국가 수준의 요인이 제도에 대한 인식 구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어 왔음에도 대부분 개인 수준의 변수에만 초점을 맞추어 지역이나 국가 간 인식 차이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체제전환국 국민의 복지·경제·정치 제도에 대한 인식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어서 국가군 및 국가별로 어떠한 인식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체제전환국 국민의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은 모두 동질적인가 아니면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가?

연구 질문 2: 체제전환국 국민의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 유형은 국가군 혹은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하는가?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수집한 LiTS(Life in Transition Survey)의 자료다. LiTS는 주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체제전환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체제전환 이후 민주주의, 국가의 역할, 미래에 관한 전망 등 다양한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 조사다. 대상 국가는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의 체제전환국과 더불어 비교를 위하여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등을 포함하기도 한

다. 2006년, 2010년, 2016년 각각 1, 2, 3회기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신 자료인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선 조사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을 살피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고용 지위, 주관적 계층의식, 국가군 및 국가 소속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였다. 이때 특히 객관적 소득 지표를 대신하여 주관적 계층의식을 살펴본 이유는 그것이 국가 간의 환율이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 더 적절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설문문항의 답변을 활용하였다. 앞서 II장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특히 복지 제도 인식은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소득재분배와 복지 납세에 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소득재분배 인식은 ‘우리나라의 부자와 빈자 간의 격차는 완화되어야 한다’의 문항의 답변을 활용하였다. 원래 5점 척도¹로 조사되었으나 추후 분석 기법 활용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3점 척도²로 변환하였다. 다음으로 추가 납세 의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영역에서 추가적 납세를 할 의향’이란 문항 중 ‘보건’과 ‘저소득층 지원’ 영역에 관한 답변을 활용하였다. 각 영역에 대하여 추가 납세 의지의 여부³를 조사하였으나 분석을 위하여 두 변수를 역코딩 후 1씩 빼 값을 합산하여 납세를 할 의향이 클수록 변수값이 높게 되도록 조정하였다.⁴ 경제 및 정치 제도 인식과 관련해서는 각각 자유시장경제 대 계획경제 및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에 대한 선호와 연관 있는 문항의 답변을 이용하였다.^{5,6} 이는 체제전환국의 특성상 경제와 정치 제도에 대하여 계획경제와 권위주의에 대한 선호가 다른 나라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문항 모두 1, 2, 3

¹ 1: 매우 반대, 2: 반대, 3: 중립, 4: 찬성, 5: 매우 찬성

² 0: 반대(원래 문항의 1, 2를 통합), 1: 중립(원래 문항의 3), 2: 찬성(원래 문항의 4, 5를 통합)

³ 1: 찬성, 2: 반대

⁴ 0: 반대, 1: 중립, 2 찬성

⁵ (경제 제도 인식) ‘다음의 문항 중 가장 동의하는 것’ - 1: 시장 경제가 최선, 2: 특정 상황에서는 계획 경제가 시장 경제보다 선호됨, 3: 시장 경제이든 계획 경제이든 상관없음.

⁶ (정치 제도 인식) ‘다음의 문항 중 가장 동의하는 것’ - 1: 민주주의가 최선, 2: 특정 상황에서는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선호됨, 3: 민주주의이든 권위주의이든 상관없음.

점을 변수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계획경제와 권위주의를 선호하는 방향이었다. 분석을 위하여 다른 문항과의 변수값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본래의 1, 2, 3점을 각각 0, 1, 2점으로 재코딩하였다.

2. 분석방법

가장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에 대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뒤로 연구 질문 1과 관련된 인식 유형 집단의 유일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LCA(Latent Class Analysis, 잠재집단분석)를 실시하였다. LCA는 개인의 응답으로 관측된 범주형 변수를 토대로 이산형(discrete)이면서 상호배타적인 잠재집단을 규명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통계기법이다(Lanza et al., 2007: 671). 여타 많은 양적 연구 기법은 변인 중심적 접근을 통하여 독립변인 분석이나 요인 간 관계 분석을 시도하지만, LCA는 관측자 중심의 기법으로서 유사한 특성이 있는 관측자를 같은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을 기반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신태수, 2010: 642; 최재성·김명일, 2014: 155). 따라서 표본을 상호배타적이고 포괄적인 하위집단으로 분류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이정은·조미형, 2009: 88). LCA는 R Studio의 poLCA 모듈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질문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앞서 LCA로 도출된 잠재집단과 국가군 및 국가에 대하여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각 1회 시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국가군 혹은 국가가 얼마만큼 어느 잠재집단에 속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어서 국가군 혹은 국가 변수를 더미화하고 이와 함께 개인 특성 관련 변수를 투입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앞서 LCA를 통하여 도출된 제도 인식 유형이 범주형 변수이지만, 일정한 서열이 있는 종속변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개인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국가군 혹은 국가 간에 제도 인식 유형에 속할 확률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STATA 16.0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에 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 분포는 남성이 5,542명(43.4%), 여성이 7,247명(56.7%)이었다. 연령은 18세부터 95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48.5세(표준편차 17.43세)였다. 교육 수준은 무학 또는 초등 교육이 972명(7.6%), 중등교육이 8,495명(66.4%), 고등교육이 3,322명(26.0%)이었다. 주관적 계층 수준은 10점 리커트 척도에 대하여 평균 4.58점(표준편차 1.6점)이었다. 국가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CIS 국가군은 5,759명(45.0%), 동유럽 국가군은 7,030명(55.0%)이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1,008명(7.9%), 카자흐스탄 1,227명(9.6%), 키르기스스탄 1,406명(11.0%), 타지키스탄 1,212명(9.5%), 우즈베키스탄 906명(7.1%), 체코 1,265명(9.9%), 헝가리 1,206명(9.4%), 라트비아 1,225명(9.6%), 리투아니아 1,168명(9.1%), 폴란드 1,069명(8.4%), 슬로베니아 1,097명(8.6%)이었다. 복지인식과 관련하여 소득 격차 완화는 평균 1.72점(표준편차 0.60점), 복지 증세 의지는 평균 1.02점(표준편차 0.90점)이었다. 경제 및 정치 제도 인식은 각각 평균 0.86점(표준편차 0.81점), 0.68점(표준편차 0.80점)이었다.

2.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 대한 LCA(잠재집단분석)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LCA(잠재집단분석)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집단 수를 2개부터 설정하여 하나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모형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LCA 결과로서 표 3의 내용과 같이 각각의 상정된 잠재집단 개수에 대한 최대 우도비(Maximum log-likelihood), AIC, BIC의 수치를 도출하였다. 최종 모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i) AIC, BIC의 값이 작을수록 모형적합도가 좋다는 점(박미경·조민호, 2016: 149), (ii) 특히 BIC 지수가 LCA에서 집단 수를 결정할 때 가장 권장되는 지표라는 점(Nylund and Muthén, 2007: 537), (iii) 모형을 실질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정도도 생각해야 한다는 점(조지

표 2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	변수값	N	%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5,542	43.4			
	여성	7,247	56.7			
	합계	12,789	100.0			
연령(18~95세)		12,789	100.0	48.50	17.43	
교육 수준	무학 및 1차	972	7.6			
	2차	8,495	66.4			
	3차	3,322	26.0			
	합계	12,789	100.0			
고용 지위	취업	6,174	52.5			
	실업	3,585	28.0			
	비경제활동인구	2,490	19.5			
	합계	12,789	100.0			
주관적 계층의식(10단계)		12,659	100.0	4.58	1.60	
국가군	합계	12,789	100.0			
	CIS군	러시아	1,008	7.9		
		카자흐스탄	1,227	9.5		
		키르기스스탄	1,406	10.9		
		타지키스탄	1,212	9.5		
		우즈베키스탄	906	7.1		
		소계	5,759	45.0		
	동유럽군	체코	1,265	9.9		
		헝가리	1,206	9.4		
		라트비아	1,225	9.6		
		리투아니아	1,168	9.1		
		폴란드	1,069	8.4		
		슬로베니아	1,097	8.6		
	소계	7,030	55.0			
소득 재분배 선호도	0-2	12,789	100.0	1.72	0.60	
복지 납세 선호도	0-2	12,789	100.0	1.02	0.90	
계획경제 선호도	0-2	12,789	100.0	0.86	0.81	
권위주의 선호도	0-2	12,789	100.0	0.68	0.80	

표 3 LCA 결과

모델	잠재집단 수	최대 우도비	AIC	BIC
1	2	-46463.47	92960.94	93087.70
2	3	-45565.03	91182.05	91375.92
3	4	-45550.91	91171.81	91432.78

주: 모델 2가 최적 모델로 선정됨

용·박태영, 2013: 67)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때 BIC 값이 모델 1보다 모델 2에서 더 낮아졌으나 모델 3에서는 다시 증가한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최종 모형은 모델 2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질문 1과 관련하여 체제전환국 국가군 및 개별 국가의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은 일률적이라기보다는 그림 1의 내용과 같이 세 개의 유형(혹은 집단)으로 나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집단 1은 빈부격차 완화를 강하게 지지하고, 사회복지 재원을 위한 납세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계획경제와 권위주의를 비교적 강하게 지지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경제 및 정치 체제에 관한 인식은 과거 소비에트의 체제를 상당히 지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단 1은 ‘체제전환 미숙형(Transition immature)’ 인식 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집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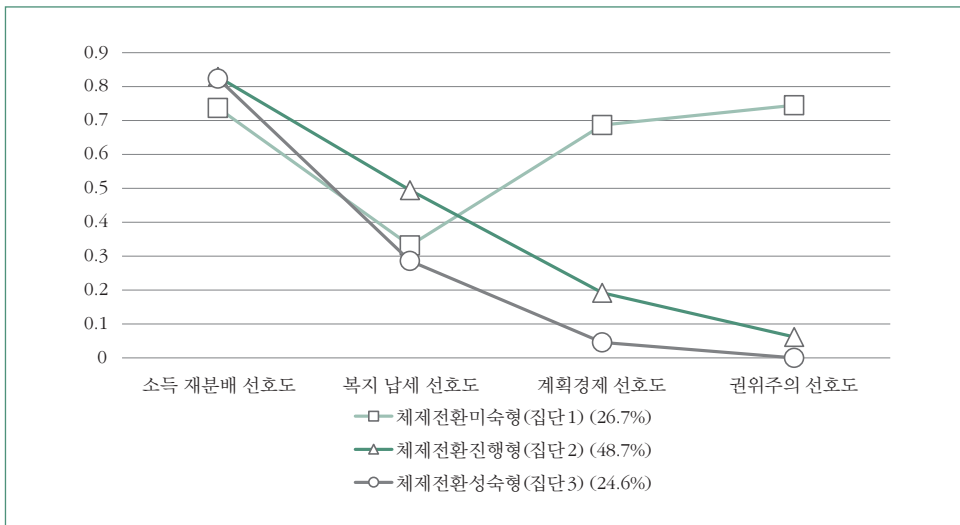


그림 1 잠재집단 분류

는 빈부격차 완화에는 다른 두 집단과 유사한 정도로 강하게 동의하지만, 사회 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집단 1과 집단 3보다 더 큰 의지를 보인다. 한편, 정치 체제 인식은 집단 2와 거의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경제 체제 인식은 아직 집단 3의 수준만큼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 2는 ‘체제전환 진행형(Transition ongoing)’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3은 집단 1과 복지 인식과 관련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경제 및 정치 체제에서 확연히 반대되는 인식을 보인다. 즉 집단 3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아주 강하게 지향하며, 체제 붕괴 이후 계획경제와 권위주의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시장경제 모델로 가장 많이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 3은 ‘체제전환 성숙형(Transition mature)’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처럼 LCA를 통해 도출된 세 집단은 탈소비에트와 체제전환 인식 적응을 기준으로 서열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때 전체 중 집단 1이 26.7%, 집단 2가 48.7%, 집단 3이 24.6%인 것으로 나타나 약 절반은 체제전환 진행형에 있으며 나머지를 체제전환 미숙형과 성숙형이 다시 반씩 차지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실질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크게 유발하는 요인은 복지인식이라기보다는 경제 및 정치 제도 인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지인식 관련 변수를 설명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빈부격차 완화에 관한 인식은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는 LiTS Ⅲ의 다른 모든 국가에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자본주의의 심화, 세계 경제 질서 등에 의해 전반적으로 모두 불평등이 심화하였다고 여기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식 유형과 상관없이 빈부격차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정도는 경제 및 정치 체제에 관한 인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체제전환 미숙형’의 경우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따로 세금을 크게 내지 않아도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앞장서서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 인식 유형 집단은 증세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체제전환 진행형’은 과도기적 단계로서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최근 사회보장 체계의 수정 및 발전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사회보장률 개선 등을 위해 다른 두 집단의 국민보다는 사회복지제도를 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의

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 성숙형’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므로 그 논리에서 납세에 적극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소극적인 것이 당연하다.

3.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 유형에 대한 국가군 및 국가별 카이제곱 검정

다음으로 개인마다 부여된 소속집단과 국가군 및 국가별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는 표 4의 내용과 같다. 제도 인식 유형과 국가군 및 개별 국가와의 독립성 검정 결과값은 각각 $\chi^2=209.791(p<.001)$, $\chi^2=1178.101(p<.001)$ 로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질문 2와 관련하여 체제전환국의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은 국가군 및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자면 첫째, ‘체제전환 미숙형’은 CIS와 동유럽 국가군 모두에서 약 25%를 차지하였으며, 기대빈도와 관측빈도가 크게 차이하지 않았다. 둘째, ‘체제전환 진행형’은 CIS 국가군에서는 약 55%, 동유럽 국가군에서는 약 40%를 차지하여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대빈도 대비 관측빈도 비율은 CIS 국가군에서 1 이상, 동유럽 국가군에서는 1 미만이었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 성숙형’은 CIS 국가군에서는 약 20%밖에 차지하지 않았으나 동유럽 국가군에서는 약 35%로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대빈도 대비 관측빈도 비율은 CIS 국가군에서는 1 미만, 동유럽 국가군에서는 1 이상의 값을 보였다. 절대적인 비중으로만 따졌을 때는 양 국가군 모두 ‘체제전환 진행형’ 인식 유형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므로 다수의 국민은 친소비에트와 탈소비에트 인식의 과도기적 단계, 혹은 중도적 위치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대빈도 대비 관측빈도의 차원으로 볼 때 CIS 국가군에서는 ‘체제전환 진행형’, 동유럽 국가군에서는 ‘체제전환 성숙형’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유럽 국가군이 CIS 국가군보다 상대적으로 더 탈소비에트적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국가별로도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기대빈도 대비 관측빈도의 값이 1.1을 넘는 수준으로 두 빈도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찾아보면

표 4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

		복지 · 경제 · 정치 제도 인식 유형				계
		체제전환 미숙형 (집단 1)	체제전환 진행형 (집단 2)	체제전환 성숙형 (집단 3)		
검정 1	CIS군	f.o.	1,344	3,094	1,321	5759
		f.e.	1,370.3	2,733.8	1,654.9	5,759.0
		%	23.3%	53.7%	22.9%	100.0%
	동유럽군	f.o.	1,699	2,977	2,354	7,030
		f.e.	1,672.7	3,337.2	2,020.1	7,030.0
		%	24.2%	42.3%	33.5%	100.0%
χ^2		209.791***				
검정 2	러시아	f.o.	416	290	302	1,008
		f.e.	239.8	478.5	289.7	1,008.0
		%	41.3%	28.8%	30.0%	100.0%
	카자흐스탄	f.o.	342	524	361	1,227
		f.e.	292.0	582.5	352.6	1,227.0
		%	27.9%	42.7%	29.4%	100.0%
	키르기스스탄	f.o.	375	746	285	1,406
		f.e.	334.5	667.4	404.0	1,406.0
		%	26.7%	53.1%	20.3%	100.0%
	타지키스탄	f.o.	154	799	259	1,212
		f.e.	288.4	575.3	348.3	1,212.0
		%	12.7%	65.9%	21.4%	100.0%
	우즈베키스탄	f.o.	57	735	114	906
		f.e.	215.6	430.1	260.3	906.0
		%	6.3%	81.1%	12.6%	100.0%
	체코	f.o.	364	470	431	1,265
		f.e.	301.0	600.5	363.5	1,265.0
		%	28.8%	37.2%	34.1%	100.0%
	헝가리	f.o.	234	567	405	1,206
		f.e.	287.0	572.5	346.6	1,206.0
		%	19.4%	47.0%	33.6%	100.0%

표 4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계속)

		복지 · 경제 · 정치 제도 인식 유형			
		체제전환 미숙형 (집단 1)	체제전환 진행형 (집단 2)	체제전환 성숙형 (집단 3)	계
라트비아	f.o.	386	397	442	1,225
	f.e.	291.5	581.5	352.0	1,225.0
	%	31.5%	32.4%	36.1%	100.0%
리투아니아	f.o.	162	543	463	1,168
	f.e.	277.9	554.5	335.6	1,168.0
	%	13.9%	46.5%	39.6%	100.0%
폴란드	f.o.	329	439	301	1,069
	f.e.	254.4	507.5	307.2	1,069.0
	%	30.8%	41.1%	28.2%	100.0%
슬로베니아	f.o.	224	561	312	1,097
	f.e.	261.0	520.8	315.2	1,097.0
	%	20.4%	51.1%	28.4%	100.0%
χ^2		1178.101***			
계	f.o.	3,043	6071	3675	12,789
	f.e.	3,043.0	6,071.0	3,675.0	12,789.0
	%	23.8%	47.5%	28.7%	100.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f.o.: 관측 빈도, f.e.: 기대 빈도, %: 관측 빈도/ 전체 관측 빈도. f.o > 1.1*f.e인 셀은 회색으로 표시됨.

CIS 국가는 ‘체제전환 미숙형’ 혹은 ‘체제전환 진행형’이 해당하였고, 동유럽 국가는 모두 ‘체제전환 미숙형’ 혹은 ‘체제전환 성숙형’이 해당하였다. 두 국가군에서 공통으로 ‘체제전환 미숙형’이 기댓값보다 두드러지는 집단으로 나타나는 것은 양측 모두 소비에트 유산이 어느 정도 인식적으로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군에서 ‘체제전환 성숙형’이 두드러지는 것은 체제전환 이후 인식적 차원에서 탈소비에트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CIS 국가는 ‘체제전환 진행형’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탈소비에트의 정도가 뒤쳐졌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 대하여 아직 인식적 차원에서 완전한 체제전환을 위한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어느 국가도 ‘체제전환 성

속형'이 40%를 넘는 사례가 없으며, 특히 동유럽 국가군에서도 '체제전환 미속형'이 여전히 20~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4. 복지 · 경제 · 정치 제도 인식 유형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앞서 실시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만으로는 개인 수준의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제 변수 차원에서 개인 수준의 변수를 고려하면서 국가군 및 국가를 더미 변수화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이 국가군이나 개별 국가냐에 따라 각각 모델 1과 모델 2로 따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모델 1에서는 국가군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CIS 국가군에 비하여 동유럽 국가군이 체제전환 진행형이나 체제전환 성숙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1.226, $p<0.05$). 이어서 모델 2에서는 승수비와 통계적 유의성을 참고하면 러시아에 비하여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체제전환 진행형이나 체제전환 성숙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기준 변수가 러시아인 것은 앞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에서 체제전환 미속형의 기대빈도 대비 관측빈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러시아였으므로 체제전환 미속형의 대표적인 국가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통제변수 차원에서 모형에 투입한 나머지 독립변수는 두 모델에서 모두 같은 경향을 보였다. 첫째,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중 중등교육, 고용지위 중 비경제활동인구 변수의 승수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1을 넘는 승수비를 갖는 변수를 보면, 무학 또는 초등교육 집단에 비하여 고등교육 집단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체제전환 진행형이나 체제전환 성숙형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1보다 작은 승수비를 갖는 변수를 보면, 취업자에 비하여 실업자는 체제전환 진행형이나 체제전환 성숙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델 1		모델 2	
	승수비 (95% 신뢰구간)	p 값	승수비 (95% 신뢰구간)	p 값
성별(0=남성)	1.033 (0.966-1.104)	0.345	1.038 (0.970-1.110)	0.278
연령	1.000 (0.998-1.002)	0.879	1.000 (0.998-1.002)	0.877
교육수준(0=무학 및 1차)				
2차	0.891 (0.777-1.021)	0.098	0.870 (0.756-1.002)	0.053
3차	0.676 (0.582-0.784)	0.000***	0.636 (0.545-0.742)	0.000***
고용 지위(0=취업)				
실업	1.227 (1.123-1.341)	0.000***	1.217 (1.112-1.330)	0.000***
비경제활동인구	1.045 (0.953-1.145)	0.353	1.009 (0.918-1.110)	0.846
주관적 계층의식	0.922 (0.903-0.942)	0.000***	0.935 (0.914-0.956)	0.000***
국가군(0=CIS)				
동유럽군	1.226 (1.142-1.317)	0.000***		
국가(0=러시아)				
카자흐스탄			1.347 (1.142-1.590)	0.000***
키르기스스탄			1.071 (0.911-1.259)	0.407
타지키스탄			1.560 (1.324-1.837)	0.000***
우즈베키스탄			1.435 (1.210-1.702)	0.000***
체코			1.383 (1.169-1.636)	0.000***
헝가리			1.656 (1.397-1.962)	0.000***

표 5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계속)

	모델 1		모델 2	
	승수비 (95% 신뢰구간)	p 값	승수비 (95% 신뢰구간)	p 값
라트비아			1.370 (1.157-1.623)	0.000***
리투아니아			2.471 (2.090-2.921)	0.000***
폴란드			1.216 (1.023-1.446)	0.026*
슬로베니아			1.414 (0.191-1.679)	0.000***
cut 1	-1.541674 (-1.752-1.332)		-1.286353 (-1.529-1.043)	
cut 2	.5667662 (0.358-0.775)		.8411823 (0.599-1.083)	
Log likelihood	-13209.424		-13136.31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상정하였다. 먼저 연구 질문 1은 ‘체제전환국 국민의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 유형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였다. 이를 밝히기 위해 LiTS(Life in Transition Survey) 2016년 자료에서 11개 체제전환국 국민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LCA(잠재집단분석)를 실시하여 제도 인식이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연구 질문 2는 ‘체제전환국 국민의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 유형은 국가군 혹은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하는가?’였다. 이에 관하여 우선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여 제도 인식 유형은 국가군 혹은 국가와 독립이 아님을 밝혔다. 추가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국가군 혹은 국가별로 어느 인식 유형 집단에 속할지의 확률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임을 드러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질문 1과 관련하여 LCA 시행 결과, 체제전환국 국민의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은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 이른바 ‘체제전환 미숙형’(26.7%), ‘체제전환 진행형’(47.7%), ‘체제전환 성숙형’(24.6%)에 속하였다. 먼저 ‘체제전환 미숙형’은 빈부격차 완화 희망 정도는 매우 높고, 사회복지 증세 찬성도는 낮으며, 계획경제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정도는 매우 높았다. 다음으로 ‘체제전환 성숙형’은 빈부격차 완화 희망 정도는 매우 높고, 사회복지 증세 찬성도는 낮으며, 계획경제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정도는 매우 낮았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 진행형’은 빈부격차 완화 희망 정도는 매우 높고, 사회복지 증세 찬성도는 비교적 높으며, 계획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정도는 앞선 두 집단의 중간에 위치하였으며, 권위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정도는 매우 낮았다. 이를 다시 변인별로 정리해 보면, 빈부격차 완화 희망 정도는 어느 집단이나 매우 높았으며, 사회복지 증세 찬성 정도에서도 ‘체제전환 진행형’을 제외하면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집단 간 차이를 유발하는 실질적 요인은 경제 및 정치 제도에 관한 인식이었으며, 계획경제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상대적 선호가 높은 ‘체제전환 성숙형’은 소비에트 유산이 개인의 인식에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체제전환 성숙형’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 소비에트 유산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체제전환 진행형’은 특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소비에트 유산이 나머지 두 집단의 중간 정도로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집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았을 때 절반 정도의 사람은 중도적인 입장이고, 나머지 절반의 반씩은 친소비에트 및 반소비에트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 질문 2에 관하여 체제전환국 국민의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은 국가군 및 국가마다 동질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CIS 국가군과 동유럽 국가군을 비교한 결과, ‘체제전환 성숙형’ 인식 유형 집단은 비율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CIS 국가군에서는 ‘체제전환 진행형’이, 동유럽 국가군에서는 ‘체제전환 성숙형’이 각각 더 뚜렷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동

유럽 국가군은 EU의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탈소비에트화가 많이 되었지만, CIS 국가군은 상대적으로 아직 친소비에트적 성향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각국에 대하여 실시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의 결과로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우선 러시아는 ‘체제전환 미숙형’에 속하는 국민이 전체의 41%로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나머지 CIS 국가들도 ‘체제전환 미숙형’과 ‘체제전환 진행형’에서 기대빈도 대비 관찰빈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소비에트 유산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동유럽 국가들도 CIS 국가와 마찬가지로 ‘체제전환 미숙형’이 두드러지기도 했으나 대체로 ‘체제전환 진행형’은 기대빈도보다 관찰빈도가 낮았으며, ‘체제전환 성숙형’에서는 기대빈도보다 관찰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절대적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어느 국가도 ‘체제전환 성숙형’이 40%를 넘지 않아 아직 완전한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여전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추가로 실시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같은 맥락의 결과가 보고되었다. 즉, 개인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고용 지위, 주관적 계층의식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CIS 국가군에 비해서 동유럽 국가군이, 러시아에 비해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이 체제전환 미숙형보다 체제전환 진행형이나 성숙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개인 수준의 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국가 간에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경제 및 정치 제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였는가? 본 연구에서는 과거 소비에트 시절의 정책적 유산과 체제 붕괴 이후의 경제 수준 및 사회 정책의 변화가 이러한 국가 간에 인식 유형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해석한다. 사회주의 체제 시절 각종 가족지원 정책과 주거 정책의 경험으로 인하여 체제전환국 국민들은 친복지적인 태도가 내재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체제 붕괴 이후에 급진적인 자유주의적 시장개혁으로 인해 높은 실업률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복지 제도의 확대의 필요성에 체제전환국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본 연구 결과는 거시적인 변수(민주주의 지수, 인구당 GDP, 실업률 등)를 통해서 체제전환국 내에서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던 연구 결과들과 직접적으로 대응된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 불

평등 정도, 실업률, 정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 등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핑거(Fenger, 2007)의 연구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계획경제와 권위주의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는 소비에트 국가군(former-USSR group)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러시아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체제전환 미숙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온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차르의 절대왕정 체제(Tsarist autocracy), 볼셰비키 혁명 이후의 중앙 집중화된 통치 방식의 오랜 역사가 민주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절차의 발전을 억압하는 장애물로 작용하였다는 학자들의 평가(Moore, 1987; Tsou, 1987)가 이러한 분류 결과를 지지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대외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2018년 기준으로 네 번째 임기에 성공한 바 있다. 이어서 체제 붕괴 이후 서구 유럽의 경제 모델이 대대적으로 도입되어 압축 성장을 기록했던 동유럽 국가들은 성공적인 체제전환국군(successful transitional states)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에서 동유럽 국가의 국민들의 체제전환 성숙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온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한 게팅(Getting, 1994)은 해당 국가의 초기 거시경제 수준과 더불어 IMF로 대변되는 외부행위자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2004년에 들어서부터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의 체제전환국들이 EU에 가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⁷이라는 가입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경제적인 제도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민주주의 수준과 경제성장 지표를 바탕으로 체제전환국의 제도적인 발전 경로를 설명한 민기채(2014)의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가 저발전국가로 분류되었는데,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체제 붕괴 이후 시장경제모델과 민주주의 제도가 유입되었지만 동유럽 국가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시경제 환경이 불안정한 상

⁷ 코펜하겐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주요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다: 법치주의의 확립과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 유럽연합 내에서의 경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유시장 환경 구축과 시장경제 기능 개선.

태에 놓여 있었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의 부재, 독재정치, 관료들의 부패로 대변되는 사회주의의 부정적인 유산이 잔존해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인 환경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의 인식이 체제전환 진행형에 속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전환국 국민의 복지·경제·정치 제도 인식을 살펴본 선구적인 연구다. 그동안의 제도 인식 연구에서 체제전환국은 애초에 주된 연구 대상도 아니었을뿐더러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도 주로 GDP 혹은 사회지출 정도 등과 같은 거시변수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여 미시적 영역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인식 차원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특히 복지인식과 더불어 체제전환국만이 가지는 특성인 계획경제와 권위주의와 같은 소비에트 유산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과거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오늘날 체제전환국 국민에게 서로 다른 정도와 형태로 남아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특히 국가군 혹은 국가별로 인식 유형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비교사회정책 차원에서의 지역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탈사회주의 복지국가가 단일한 복지체제로 수렴하는지 혹은 분기되는지의 논의(민기채, 2014)에 있어서 후자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인식 유형은 거시 변수를 통하여 여러 체제전환국을 유형화했던 선행연구의 결과(예: 러시아-소비에트 국가, 중앙아시아-저발전국가, 동유럽-성공적인 체제전환국)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체제전환국들의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는 접근 방식이 현재로서 유효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LiTS의 2016년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종단적 추이를 살피지 못하였다. 기존의 2006, 2010년 자료와 더불어 장차 새롭게 가공될 LiTS 자료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인식의 궤적 등을 살필 것을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둘째, 양적 분석을 통한 제도 인식의 유형화 자체를 우선적 목적에 두므로써 유형화 결과에 관한 역사적·사회과학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풍부한 질적 해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가 복지국가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영역인 중앙아시아국과 이를 포함하는 체

제전환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론의 공백을 메꾸었다는 의의가 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질적 해석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는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체제전환국 국민의 인식 자료만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전술한 연구 결과가 서구 사회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수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체제전환국 국민의 인식 자료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 국민의 인식을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분석해 본다면 두 사회 간의 제도적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일: 2020년 10월 15일 | 심사일: 2021년 2월 23일 |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2일

참고문헌

- 김윤태·유승호·이훈희. 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연구』 45집, 183-212.
- 노대명·전지현. 2011.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민기재. 2014. “체제전환국 복지국가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박미경·조민효. 2016.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 137-164.
- 손병돈. 2016.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 반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권 4호, 5-34.
- 신태수. 2010. “중단프로파일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잠재집단연구: 성장혼합모형과 비교를 통하여.” 『교육평가연구』 23권 3호, 641-664.
- 안상훈. 2009.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16권 1호, 163-192.
- 이상록·김형관. 2013.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 『사회과학연구』 29권 3호, 433-458.
- 이정은·조미형. 2009. “사회적 배제 집단의 잠재적 유형 분류 및 성별과 학력에 따른 차

- 이 분석.” 『사회복지정책』 36권 3호, 79-103.
- 전희정·서동희, 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복지선호와 증세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2권 2호, 32-62.
- 조돈문, 2001. “노동시장과 계급의식 분석: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효과.” 『산업노동연구』 7권 1호, 157-193.
- 조지용·박태영, 2013. “잠재집단분석을 이용한 퇴직자의 사회적 관계유형 변화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8권 4호, 599-623.
- 최재성·김명일, 2014.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패턴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6호, 147-171.
- Andersen, J. G. 2008. “Public Support for the Danish Welfare State: Interests and Values, Institutions and Performance.” In E. Albæk, V. Eliason, S. N. Norgarrd, and H. Schwartz, eds. *Crisis, Miracles and Beyond: Negotiated Adaptation of the Danish Welfare State*, 75-114. Aarhus: Aarhus Universitetsforlag.
- Anderson, C. and C. Guillory. 1997. “Political Institution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 Cross-National Analysis of Consensus and Majoritarian System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1), 66-81.
- Andreß, H. and T. Heien. 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4), 337-356.
- Blekesaune, M. and J. Quadagno. 2003.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5), 415-427.
- Bonoli, G. 2000. “Public Attitudes to Social Protection and Political Economy Traditions in Western Europe.” *European Societies* 2(4), 431-452.
- Christensen, T. and P. Læg Reid. 2003. “Trust in Government: The Significance of Attitudes towards Democracy, the Public Sector and Public Sector Reform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s 64th National Conference, Washington, DC.
- Cook, F. and E. Barrett. 1992. *Support for the American Welfare Sta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rawford, B. and A. Lijphart. 1997. *Liberalization and Leninist Legacies:*

- Comparative Perspective on Democratic Transi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Deacon, B. 1992. *The New Eastern Europe: Social Policy Past, Present, and Fu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 Edlund, J. 1999. "Trust in Government and Welfare Regimes: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nd Financial Cheating in the USA and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5(3), 341-370.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UK: Polity Press.
- Evans, G. 1996.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Support for Welfare and Redistribution: An Evaluation of Competing Theories." In B. Taylor and K. Thomson, Eds. *Understanding Change in Social Attitudes*, 185-208. Aldershot, UK: Dartmouth.
- Fenger, M. 2007. "Welfare Regim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corporating Post-communist Countries in a Welfare Regime Typology." *Contemporary Issues and Ideas in Social Sciences* 3(2), 1-30.
- Gelissen, H. 2000. "Popular Support for Institutionalized Solidarity: A Comparison between European Welfare States." *Institu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9(4), 285-300.
- Getting, U. 1994. "Destruction, Adjustment and Innovation: Social Policy Transformation in Eastern and Central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4(3), 181-200.
- Groskind, F. 1994. "Ideological Influences on Public Support for Assistance to Poor Families." *Social Work* 39(1), 81-89.
- Habibov, N. 2013. "Who Wants to Redistribute? An Analysis of 14 Post-Soviet Nation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7(3), 262-286.
- Hasenfeld, Y. and J. A. Rafferty. 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4), 1027-1048.
- Heien, T. and D. Hofäcker. 1999. *How Do Welfare Regimes Influence Attitudes? A Comparison of Five European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1985-1996* (Working Paper No. 9). Bielefeld, Germany: Universität Bielefeld.
- Jaeger, M. 2006. "Welfare Regimes and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on: The

- Regime Hypothesis Revisited.”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2(2), 157-170.
- Korpi, W. 1980. “Social Policy and Distributional Conflict in the Capitalist Democracies: A Preliminary Comparative Framework.” *West European Politics* 3(3), 296-316.
- Landier, A., D. Thesmar, and M. Thoenig. 2008. “Investigating Capitalism Aversion.” *Economic Policy* 23(55), 466-497.
- Lanza, S. T., L. M. Collins, D. R. Lemmon, and J. L. Schafer. 2007. “PROC LCA: A SAS Procedure for Latent Class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671-694.
- Larsen, C. A. 2008. “The Institutional Logic of Welfare Attitudes: How Welfare Regimes Influence Public Suppor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2), 145-168.
- Lipset, S. M. 1961.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1981 expanded 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anning, N. 2004. “Diversity and Change in Pre-accession Central and Eastern Europe since 1989.”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4(3), 211-232.
- Mayda, A. M. 2006. “Who Is Against Immigrat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3), 510-530.
- Mayda, A. M. and D. Rodrik. 2005. “Why Are Some People (And Countries) More Protectionist Than Others?” *European Economic Review* 49(6), 1393-1430.
- Mishler, W. and R. Rose. 2001. “What Are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Testing Institutional and Cultural Theories in Post-communist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1), 30-62.
- Moore, B. 1987. *Authority and Inequality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ylund, K., T. Asparouhov, and B. O. Muthén.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Pettersen, P. A. 2001. “Welfare State Legitimacy: Ranking, Rating, Paying: The Popularity and Support for Norwegian Welfare Programmes in the Mid 1990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4, 27-49.

- Pierson, P. 1993. "When Effect Becomes Cause: Policy Feedback and Political Change." *World Politics* 45(4), 595-628.
- Ponza, M., G. J. Duncan, M. Corcoran, and F. Groskind. 1988. "The Guns of Autumn? Age Differences in Support for Income Transfers to the Young and Old." *Public Opinion Quarterly* 52, 441-466.
- Pop-Eleches, G. and J. A. Tucker. 2014. "Communist Socialization and Post-Communist Economic and Political Attitudes." *Electoral Studies* 33, 77-89.
- Rothstein, B. 1996. "Political Institutions: An Overview." In Goodin, R. E. and H. D. Klingemann, eds. *A New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vallfors, S. 1997.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 283-304.
- _____. 2004. "Class, Attitudes and the Welfare State: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7(2), 119-138.
- _____. 2007. *The political Sociology of the Welfare State: Institutions, Social Cleavages, and Orientatio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2. *Contested Welfare States: Welfare Attitudes in Europe and Beyon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Taylor-Gooby, P. 1985. "Attitudes to Welfare." *Journal of Social Policy* 14(1), 73-81.
- Tsou, T. 1987. "Marxism, the Leninist Party, the masses, and the Citizens in the Rebuilding of the Chinese State." In S. R. Schram, ed. *Foundation and Limits of State Power in China*. London: University of London.
- Weir, M. and T. Skocpol. 1985. "State Structures and Possibilities for 'Keynesian' Responses to the Great Depression in Swede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In P. Evans, D. Rueschmeyer, and T.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Typology of Institutional Perception on Welfare·Economy·Politics Systems of People from Post-Socialism Countries: National Differences

Inwook K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Joonhyeo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institutional perception on welfare·economy·politics systems of people from post-socialism countries and to investigate which country cluster's or country's people are likely to belong to a certain type. Using the Life in Transition Survey (LITS) data provided by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sets of institutional perception of 12,789 people from 11 transition countries (5 CIS countries including Russia and 4 Middle Asian countries, and 6 East European countries) were categorized into 3 groups by latent class analysis (LCA). It was confirmed that the sets of institutional perception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rbitrarily named 'Transition immature,' 'Transition ongoing,' and 'Transition mature.' Next, pairs of chi-square independence test an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test whether people from a certain country cluster or country are more likely to fall into a specific group. In fact, people from Eastern European than CIS are more likely to fall into a specific group, and almost all other countries than Russia are more likely to support a planned economy and an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This indicates that the so-called 'Soviet legacy' remains disproportionate within the Post-Socialism Countries.

Keywords | Post-Socialism Country, Soviet Legacy, Institutional Perception,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y

